



2024년 / 1월 5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22일(월) ~ : 기부금 연말정산 본인 확인 가능 및 수정
- 1월 25일(목):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한해 후원과 참여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개시: 2024년1월 22일부터 진행중입니다.

기부금 합산기간: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기부금 내역이 다를 경우 언제라도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역사 속의 오늘

愛國 禁煙 - 1907. 1. 29

세수 부족으로 인한 담배값 인상 여론을 정부가 키우고 있는 듯하다. 연말연시에 가장 큰 소비 진폭을 보이는 기호품은 담배였고 앞으로도 담배일 것이다. 1907년 1월 29일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구의 출판사인 광문사 사장으로 있던 김광제는 개인적 금연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들불을 일으켰다.

일본은 1904년 8월 강제적으로 체결된 한일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근거로 1905년 6월 대한제국의 문란한 화폐를 정리한다며 그 비용으로 한국에 300만 원의 화폐정리자금채(貨幣整理資金債)를 관세 수입을 담보로 떠넘겼다. 또 같은 달에 구채(舊債) 상환과 세계(歲計) 부족 보충비 구실로 일본에서 공채로 모집한 200만 원을 국고금 수입을 담보로 한국에 들여왔다. 같은 해 12월에는 천일은행과 한성은행의 보조 대부와 금융조합 창립자금으로 150만 원을 차입했다. 1906년 3월에는 통감부 개설로 소요되는 시정(施政) 개선비와 기업자금 명목으로 일본흥업은행에서 1,000만원이 차입됐다. 이렇게 해서 총 1,650만 원 가운데 실제로 도입된 차관 1,150만 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합친 것이 1,300만 원이었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얹지로 떠넘긴 것이었다.

1906년을 기준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예산 세입액은 13,189,336원, 세출액은 13,950,523원으로 적자 상태였다. 이런 국난과 마주하면 나라를 위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민인들이었고 1907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들불처럼 번져 한반도 아니 연해주와 하와이 이주 한인들까지 함께했던 국채보상운동은 앞서 언급한대로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제의 금연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김광제는 광문사 특별회의 석상에서 “나 사장 김광제, 부사장 서상돈부터 흡연 도구들을 만장하신 여러분 보는 앞에서 부숴 버릴 것입니다.” 선언한 후 곰방대와 재떨이를 부수며 “황천(皇天)이 감응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대사를 무사히 이루시고, 민국을 보존케 하옵소서!”라고 외쳤다. 그가 이야기한 ‘대사’는 앞서 자세하게 언급된 국채 1300만원을 민인의 손으로 갚아버리자는 것이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고 나라 앞에서 황실의 대안은 난망했다. 아니 갚을 돈은 있었으나 굳이 갚지 않아도 황실은 건재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0만 민중이 3개월 동안 금연하여 1300만 원을 모아보자는 제 일성이 1907년 1월 29일 대구에서 터졌던 것이다. 이날 이후 실로 수많은 이들이 앞 다투어 담배를 끊었다. 금연 뿐 아니라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는 여인들이 속출했고 여학생들은 머리칼을 잘라 현금을 했으며 사람취급 못 받던 백정들도 십시일반에 함께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하와이와 연해주 중국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조선 민인들이 함께 돈을 모았다. 언론기관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이를 반일운동으로 취급하여 일진회를 조종하여 방해하고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을 횡령으로 모함하여 구속하는 등 사실상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당시 모아진 돈은 결국 국채보상에 쓰이지 못하고 한일병합 후 일본제국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망국을 목전에 둔 대한제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던 민인들의 '愛國禁煙運動'은 용두사미격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우리는 그 이유를 90년 후 한반도 남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외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나선 기억이 선연하다. 349만 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금을 모았다. 국채보상운동에 맞먹을 만큼 전국적 운동으로 벌어졌지만 일명 '금덩어리'라 불리던 덩치 큰 금들은 실제 시중으로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5만원을 채 넘지 않던 금 한 돈은 이후 20만원을 호가하며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금값'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 모으기에 동참했던 시민들은 더욱 강력해진 신자유주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21세기를 맞이했다. 90년 전인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고종 황제는 단지 '금연'으로 동참했을 뿐이다. 당시 대한제국 황실이 보유하고 있던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내탕금에 비하면 참으로 소박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황제를 비롯한 왕실 인사들과 친일관료들은 대한제국의 부채에 대해 민인들만큼 절박했을 것인지 궁금하다.

수없이 거듭된 환란에도 한반도에 한국이 존재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의 반성이 거듭되었기 때문이다. 반성해야 하는 이들의 반성과 어우러질 때 민인들의 반성과 헌신이 비로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